

# 건축도시 정책동향

Vol. 088

건축·도시

AURI POLICY UPDATES

- 법·제도 동향
- 계획수립 동향
- 사업추진 동향
- 시스템구축 및 기타 동향

(auri) 건축공간연구원

## 건축도시정책동향 Vol.88

발행	건축공간연구원(auri)
발행인	이영범
발행일	2022년 11월 15일
ISSN	2635-5140
기획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집필진	이종민, 방보람, 김설희
주소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8층
연락처	044-417-9868
이메일	brbang@auri.re.kr

### [ 안내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우름 사이트([www.aurum.re.kr](http://www.aurum.re.kr))'에 접속하면 건축·도시 관련 분야 최신 정책정보를 더욱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 Contents

Vol.88

2

## 건축·도시 분야 법·제도 동향

국토부, 「도시철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국토부, 「국토계획법」·「개발제한구역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문화재청, 고도(古都) 주민 주거환경 개선 지원 확대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건축 설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광주광역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개정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개정 추진

9

## 건축·도시 분야 계획수립 동향

관계부처합동, 윤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비전과 추진전략 발표  
국토부, '광역교통 개선 추진 방안' 마련  
국토부,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행안부, 균형발전, 건전재정 중심의 '보통교부세 혁신방안' 발표  
고용부,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 발표  
서울특별시, '동서울터미널' 최고 40층 광역교통 복합공간으로, 사전협상 착수  
광주광역시, 도시이용인구 3천만 시대 개막 위한 '신활력 전략계획' 수립 착수  
경상남도, '초광역 경제동맹 발전전략 추진 계획' 발표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이 행복한 제주 숲 만들기 추진계획(22~26)' 발표

18

## 건축·도시 분야 사업추진 동향

국토부, 주택도시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국토부,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 추진  
국토부, 2022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경남 진주시" 등 14개 도시 선정  
국토부,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최초 준공지구 탄생

행안부, 서울 용산 이태원 사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체부, 국제회의복합지구, 국제회의집적시설로 지정받을 지자체와 시설 공모  
 문체부, 지자체 대상으로 '2024년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 공모  
 행복청, 세종~공주 광역 비알티(BRT) 2025년 운행  
 서울특별시, '송현동 부지' 한 세기 만에 시민 품, 24.12.까지 약 2년 간 임시개방  
 서울특별시, 폐현수막 재활용 건축자재로 남산도서관에 친환경 독서공간 조성  
 서울특별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26곳 선정  
 서울특별시, '26년까지 노후경로당 321개소 저탄소 친환경건물로 전환  
 서울특별시, 천왕근린공원에 메르세데스-벤츠와 '도시숲' 조성 완료  
 부산광역시, 청년 1인 가구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한 안심홈세트 지원  
 대구광역시, 여성이 안전한 골목길 만든다  
 대전광역시, 보문산에 남겨진 1930년대 별장건축, 대전시 문화재 등록 예고  
 전라북도, '2023년 예쁜간판 꾸미기' 공모사업 전주, 익산, 남원 3개 시·군 선정  
 전라남도, 지역 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 추진  
 전라남도, 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6개 시군서 추진  
 경상북도, 구미·문경·예천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조성  
 경상북도, '경북형 소규모마을 활성화 시범사업' 5개 마을 추진  
 경상남도, 10월부터 3개월간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대상 종합진단  
 경상남도, 남해군 이어마을, 전국 유일 '일등어촌' 선정  
 제주특별자치도, 아시아 최초 국제안전도시 4차 공인 확정

## 건축·도시 분야 시스템구축 및 기타 동향 41

국토부, K-apr 시스템 고도화로 '관리비 투명화·사각지대 해소'  
 행복청, 건설현장 지능형 안전관리 활용해 안전한 행복도시 건설  
 경상남도, 11월부터 '건설공사 불법 신고센터' 운영

# 건축·도시

## AURI Policy Updates

2022년 10월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시·도에서 발표한 건축·도시 관련 분야 보도자료를 관련 주제, 담당 기관별로 구분하고,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정리하여 제공합니다.

# 건축·도시분야 법·제도 동향



## 국토부, 「도시철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철도투자개발과. 2022.10.06.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22.9)」에서 제시한 도시철도 물류 서비스\* 도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등 「도시철도법 시행령」,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월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도시철도망을 활용한 화물 자동차 - 화물 지하철 연계 물류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생활물류체계 첨단화' 연구개발 진행 중(21~27)

이번에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도시철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철도법 하위법령 개정(안)]

구분	주요 내용
도시철도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철도운영자가 물류부대사업을 위해 도시철도 차량기지 등에 설치하는 물류시설이 명확하게 '도시철도시설'에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 개선</li> <li>*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없이도 물류부대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도시철도 운영자가 '도시철도시설'에 택배분류장, 창고 등 물류시설 설치 가능</li> <li>- 도시철도 운영자도 도시철도 운영이나 도시철도와 타 교통수단과 연계수송을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도시철도시설 등 소유 자산을 이용하여 물류부대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li> </ul>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철도 운영자의 반복적인 의무위반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하기 위해, 가중처분의 적용시점을 '최초 행정처분일'에서 '최초 위반 행위가 적발된 날'로 개선</li> </ul>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복선선로를 운행하는 노면전차(트램)는 우측 통행을 원칙으로 하되, 선로 또는 노면전차가 고장난 경우, 사고 등 복구를 위해 운행되는 차량이나 공사를 위해 운행되는 차량의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좌측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li> <li>* 이에 대해, 일반적인 도시철도와 같이 좌측통행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li> <li>-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차량기지 내에서 운전하는 경우, 시험 운전하는 경우, 사고 등으로 인한 일시적으로 단선 운전하는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예외적으로 좌측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선</li> </ul>

## 국토부, 「국토계획법」·「개발제한구역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도시정책과, 녹색도시과. 2022.10.27.

건축  
정책

국토  
정책

도시  
정책

국토교통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및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에서 발표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각종 허가·심의 절차 간소화를 통한 국민·기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국토계획법」·「개발제한구역법」 하위법령 개정(안)〕

구분	주요 내용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의 전략기술 보유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 의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4배까지 완화하여 적용</li> <li>-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주택지에서 서 더 많은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li> <li>- 소규모 증축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전체 부지 면적의 10% 이내에서 증축하거나 증축으로 인해 대지가 10% 이내 범위에서 확장되는 경우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하여 심의에 소요되던 기간(최소 60일 이상) 단축</li> <li>-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절차도 간소화하여, 용도가 동일한 여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 연면적을 합산하여 10% 범위 내에서 변경되면 실시계획 인가가 면제될 수 있도록 개선</li> </ul>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민의견 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받은 시설에 경미한 변경*이 발생하여 허가를 다시 받는 경우,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li> <li>*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이 축소되는 경우, 측량오차의 반영, 건축법상 허가신고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경우</li> <li>-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때, 도로 등 기존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지하를 활용하는 경우 에는 별도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면제</li> </ul>

## 문화재청, 고도(古都) 주민 주거환경 개선 지원 확대

고도보존육성과. 2022.10.14.



문화재청은 경주와 공주, 부여, 익산 등 4개 고도의 경관과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고도(古都) 이미지 찾기 사업\*’의 규제개선을 통해 주민지원을 확대한다.

\* 고도(古都) 이미지찾기 사업: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는 고도 지정지구 내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한옥 신축, 가로경관 개선, 역사자원 정비, 주차장 및 편의시설 조성, 역사공원 조성 등 주거환경개선과 더불어 역사문화적 이미지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  
이를 위해 경주, 공주, 부여, 익산 등 4개 지자체들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요 개정(안)]

구분	주거환경 개정 전	주거환경 개정 후
한옥	가. 비한옥 및 불량한옥을 한옥으로 신축, 개축, 재축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1억원 나. 한옥으로 신축, 증축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8천만원 다. 한옥을 대수선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	가. 한옥으로 신축, 개축, 재축, 증축하는 경우 - 담장·대문 포함 : 총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1억5천만 원 - 담장·대문 미포함 : 총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1억1천만 원 나. 한옥을 수선·대수선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8천만원
건축 자산	-	가. 「한옥등건축자산법」 제10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건축자산을 수선·대수선 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1억3천만원 나. 고도의 역사적 사건·인물 등과 관련된 건축물 중 건립한 지 50년이 지나 보존할 가치를 지닌 건축물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를 거친 건축자산을 수선·대수선 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50%범위에서 최대 8천만원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의 가로환경 개선사업 주요 개정(안)]

구분	가로환경 개정 전	가로환경 개정 후
담장, 대문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총 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 지원
가로변 건축물 외관정비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 지원 (간판시설 포함)	총 공사비의 50% 범위에서 각 층별 3천만원 지원 (간판시설 포함)
간판	총 설치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2백만원 지원	총 설치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2백만원 지원

##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건축 설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건설용역과. 2022.10.27.

건축  
정책

문화  
관광

조달청은 공공건축물의 설계자 선정을 위한 「건축 설계공모 운영 기준」과 「건축 설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하고 11월 1일과 내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 \* 설계비 1억 원 이상 건축물 설계는 원칙적으로 설계공모를 해야 하며, 주차장, 창고 등 일부 건축물에 대해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해 설계자 선정

### [공공건축물 설계자 선정을 위한 기준 개정(안)]

구분	개정 내용
(1억원 이상) 건축설계 공모운영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모작품이 건축선, 건폐·용적률, 주차대수 등 건축 관련 법규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검토 의무화 → 실제 건축이 곤란한 공모작품 선정 제외</li> <li>- 반드시 담당건축사가 공모작품을 설명하고 심사위원이 질의 응답을 실시한 후 평가하도록 하여 해당 사업에 가장 적합한 설계 선정</li> <li>- 수요기관이 1명 이상의 심사위원*을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하여 심사에 다양한 시각 반영</li> <li>* 건축사인 다른 공공기관 또는 유관기관 임직원, 공공건축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민간 건축사 등을 대상</li> </ul>
건축설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유기술자 만점기준 8명 → 4명으로 완화</li> <li>- 경력인정범위 건축계획·설계 → 건축 관련 모든 분야*로 확대</li> <li>* 건축계획·설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실내건축, 건축품질관리</li> <li>- 신용평가등급 만점기준 3단계 하향</li> <li>-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기간에 따라 신용도 평가 시 감점하던 조항을 폐지하여 같은 사안으로 계속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li> </ul>

## 광주광역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

건축경관과. 2022.10.18.

건축  
정책

안전

광주광역시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지난 8월 4일 개정된 건축물관리법령을 반영한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개정·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 건축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체공사를 담당하는 공무원, 작업자, 감리자 등이 준수해야 할 건축물관리법령 및 지침 등을 알기 쉽고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정리한 기준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존에 건축주가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으려면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면 됐지만, 개정사항으로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 해체공사 착공신고 시 해체공사 계약서 뿐 아니라 감리자의 해체계획 검토서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의 서류를 제출받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더불어 허가권자의 현장점검을 의무화해 해체건축물 현황, 주변 도로, 보행자 및 차량 통행 안전관리대책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개정 추진

건축주택과. 2022.10.06.

건축  
정책

주택  
정책

도시  
정책

울산광역시는 민선 8기 주택공약인 ‘구도심 새집 갖기 재개발’을 구체화한 ‘울산형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사업’을 북구 염포동 중리마을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한데 이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를 개정하고 10월 6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시행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제정된 조례로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개정안

구분	주요 내용
노후·불량 건축물의 결정기준	주택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인 공동주택의 경과연수 기준 30년 → 20년으로 조정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추진 조건	노후·불량건축물 수 기준을 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67%에서 57% 이상인 경우로 완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공급비율을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상향되는 용적률의 20%로 규정하는 등 사업시행자의 부담 경감

이밖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거점사업의 통합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사업시행자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완료 또는 폐지한 경우 구청장등에게 인계할 서류에 관한 사항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규정들에 대해서도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개정 추진

자치행정과. 2022.10.06.

국토  
정책

도시  
정책

제주특별자치도는 신활력플러스 및 농촌협약 사업 지원 근거를 확보해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활성화 등 농촌 경제 활력을 도모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농촌어촌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성과와 혜택이 지속·안착 될 수 있도록 사업승인 조건에 따른 이행조치이면서, 2023년도 공모사업인 ‘농촌협약’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농식품부의 사전 공모 조건에 따른 조례개정이다.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협약에 관한 사항,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사항, ▲농촌협약 행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다.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지역개발사업, 농촌융복합산업 등으로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해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며, 농촌협약 사업인 경우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원방식을 전환해 지방 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 건축·도시분야 계획수립 동향



## 관계부처합동, 윤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비전과 추진전략 발표

국조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2022.10.26.



정부는 10월 26일(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토대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계획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 주요 내용 ]

3대 정책방향		
1. 책임있는 실천 : 과학과 합리에 바탕을 둔 의사결정과 정책추진 2. 질서있는 전환 : 법과 절차의 준수, 초당적 협력과 사회적 합의 중시 3. 혁신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 혁신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4대 전략 · 12대 과제	가. 구체적·효율적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나. 민간이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1. 원전·신재생e 등 무탄소 전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2. 저탄소 산업구조 및 순환경제로의 전환 3. 국토의 저탄소화를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4. 과학기술 혁신과 규제개선을 통한 탄소중립 가속화 5. 핵심산업 육성을 통한 세계시장 선도 및 新시장 창출 6. 탄소중립 친화적인 재정·금융 프로그램 구축·운영 및 투자 확대
	다. 모든 사회구성원의 공감과 협력을 통해 함께하는 탄소중립	라. 기후위기 적응과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7. 에너지 소비절감과 탄소중립 국민실천 8. 지방이 중심이 되는 탄소중립 9. 근로자 고용안정과 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일자리 전환 지원	10. 적응주체 모두가 함께 협력하는 기후위기 적응 기반 구축 11. 국제사회 탄소중립 이행 선도 12. 모든 과제의 전 과정 상시 이행관리 및 환류체계 구축

이번 전략은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고, 각계 각층과의 충실한 소통과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민간과 지방 주도로 탄소중립을 실천한다는 측면에서 지난 정부 정책과 차별을 두고 있다.

특히, 원전 확대 및 재생에너지와의 조화 등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에 근거한 합리적인 온실가스 감축, 투명하고 체계적인 상시 이행관리시스템 및 범부처 통합 지원체계의 구축 등을 통해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여나갈 것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방향]

기존에는 (AS-IS)	→	앞으로 (TO-BE)
거시 목표		단계별 목표
실행방안 미흡		실행방안 구체화
정부주도 Top-down		민간·지자체와 함께 소통강화
원전 배제, 비현실적 에너지 정책		원전+재생e 균형잡힌 에너지믹스
형식적 이행점검		투명하고 체계적인 이행 점검체계 구축
부처 산발적 인허가		범부처 통합지원체계 구축

## 국토부, '광역교통 개선 추진 방안' 마련

광역교통정책과. 2022.10.12.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신도시 등의 광역교통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교통 불편 완화를 위해 개선대책이 수립된 128개 모든 지구에 대하여 입주현황 및 개선대책 이행현황, 교통서비스 현황, 지자체 의견 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128개 중 91개 지구의 개선대책이 진행 중(37개 지구 완료)이며, 특별대책지구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구는 39개 지구이다.

- \* ① 입주가 진행되었거나 1년 이내에 입주 예정 지구 중
- ② 개선대책 이행을 또는 집행률이 50% 미만이거나 철도사업 1년 이상 지연된 지구

조사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 개정(안)]

구분	대상기준	개선 내용
집중 관리지구	<b>특별대책지구 지정요건 해당지구</b> 입주진행 또는 예정지구(1년 이내) 중 개선대책 이행을 또는 집행률이 50% 미만이거나 철도사업 1년 이상 지연 지구	① 대중교통 중심의 종합적인 단기대책 마련 - 광역버스 운행 개선 - 시내·마을버스 운행 개선 -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확대 등
	<b>교통서비스 하위 지구</b> 교통서비스현황 분석결과(KOTI) 권역별 중간(50%) 이하 지구	② 광역교통 시설 수요발굴 병행 - 사업발굴 (권역별 협의체 등) - 중장기 계획수립 시 연계·검토
일반 관리지구	<b>비주거·소규모 지구 등</b> - 비주거지구(산업·관광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 소규모지구(계획인구 1만명 이하) - 기타지구(개선대책 완료 3년 경과, 광역통행량 부족, 서울·세종 등)	① 광역버스 중심 대중교통 개선 - 광역버스 증차, 2층 전기버스 등 * 지자체 추진의지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단기 대책 검토·마련
	<b>교통서비스 상위지구</b> 교통서비스현황 분석결과(KOTI) 권역별 중간(50%) 이상 지구	② 광역교통 시설 수요발굴 병행 - 사업발굴 (권역별 협의체 등) - 중장기 계획수립 시 연계·검토
중장기 관리지구	<b>입주시작이 1년 이상 남은지구</b> (개선대책 초기단계)	①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 입주초기 대중교통 지원비 반영 ② 개선대책 이행현황 관리 - 사업시기 조정 (입주계획 연계)

## 국토부,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주택공급기획과, 공공주택정책과 등. 2022.10.26.

건축  
정책

국토  
정책

주택  
정책

국토교통부는 10월 26일(수)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관계 부처 합동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미래 세대인 청년층과 건전한 중산층의 주거 희망을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그간의 논의를 반영하여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마련하였다.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분양물량 3배 이상 확대	‘18~’22년 14.7만호 → ‘23~’27년 50만호			
	청년 특공 신설	‘18~’22년 9.7만호 → ‘23~’27년 34만호			
	중장년층 공급 확대	‘18~’22년 5만호 → ‘23~’27년 16만호			
다양한 주거선택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눔형(25만호) : 시세 70% 이하로 분양 받고, 향후 시세차익 70% 보장</li> <li>- 선택형(10만호) : 6년간 살아보고 분양 여부 자유롭게 선택</li> <li>- 일반형(15만호) : 시세 80% 수준 분양</li> </ul>				
획기적 내집마련 자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택형·나눔형 초저리장기 전용모기지 신설</li> <li>- 일반형 기존 주택기금대출 활용 → 청년층 한도·금리 우대</li> </ul>				
사전청약 조기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下 약 3,100호 고양창릉 1,322호, 고덕강일 500호, 양정역세권 549호 등</li> <li>- ‘23.上 약 3,600호 동작구 수방사 263호, 마곡10-2 260호, 남양주왕숙 942호 등</li> <li>- ‘23.下 약 3,800호 서울 대방 836호, 서울 우레 260호, 면목행정타운 240호 등</li> </ul>				
민간분양 청약제도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층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에 추천제 확대</li> <li>- 4050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평수는 가점제 확대</li> </ul>				
	면적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현행	개선(안)	현행	개선(안)
	60㎡ 이하	가점 100%	가점 40% 추첨 60%	가점 75% 추첨 25%	가점 40%, 추첨 60%
	60 ~ 85㎡		가점 70% 추첨 30%		가점 70%, 추첨 30%
85㎡ 초과	가점 50% 추첨 50%	가점 80% 추첨 20%	가점 30% 추첨 70%	가점 50%, 추첨 50%	
* 비규제지역은 85㎡ 이하 가점 40% 추첨 60%, 85㎡ 초과 추첨 100% 현행 유지					

## 행안부, 균형발전, 건전재정 중심의 '보통교부세 혁신방안' 발표

교부세과. 2022.10.31.



행정안전부는 10월 31일(월)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보통교부세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 (근거)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 (기능) 지방교부세 제도 운영방향 등 심의·자문  
(구성) 총 21명 / 지방재정 전문가 등 민간위원 19인 및 정부위원 2인

이번 혁신방안은 인구감소, 경제의 수도권 집중, 글로벌 경제위기 등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력제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재정 건전성 강화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었다.

### ['보통교부세 혁신방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지역경제 활력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경제비를 산업단지 수요에 신규 반영, 또한 혁신도시의 산업거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도시도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에 준하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야 : (현행) 환경보호비 → (개선) 환경보호비 + 산업경제비</li> <li>* 대상 : (현행) 산업단지+기업도시 → (개선) 산업단지+기업도시+혁신도시</li> </ul> </li> <li>- 대도시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지자체가 해당 기업에 대해 감면하는 지방세 감면액의 300%를 수요에 반영하여 지원</li> <li>- 소상공인 경기 침체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수요 신설</li> </ul>																														
인구구조 변화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감소지역을 대폭 지원하는 방향으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통계 기준 6개월 평균 인구 수 → 36개월 평균 인구 수로 변경</li> </ul> </li> <li>- 출산장려 수요 산정방법(반영률)을 50% 확대하여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자체는 낮은 지자체보다 최대 225%p 반영률을 더 적용</li> </ul> <p>&lt;출산장려 수요산정방법(반영률)&gt;</p> <table border="1"> <thead> <tr> <th>유형</th> <th>합계출산율</th> <th>반영률</th> <th>유형</th> <th>합계출산율</th> <th>반영률</th> </tr> </thead> <tbody> <tr> <td>1유형</td> <td>0.92~1.12명</td> <td>50%</td> <td>1유형</td> <td>0.81~1.01명</td> <td>75%</td> </tr> <tr> <td>2유형</td> <td>1.12~1.32명</td> <td>100%</td> <td>2유형</td> <td>1.01~1.21명</td> <td>150%</td> </tr> <tr> <td>3유형</td> <td>1.32~1.52명</td> <td>150%</td> <td>3유형</td> <td>1.21~1.41명</td> <td>225%</td> </tr> <tr> <td>4유형</td> <td>1.52명 이상</td> <td>200%</td> <td>4유형</td> <td>1.41명 이상</td> <td>300%</td> </tr> </tbody> </table>	유형	합계출산율	반영률	유형	합계출산율	반영률	1유형	0.92~1.12명	50%	1유형	0.81~1.01명	75%	2유형	1.12~1.32명	100%	2유형	1.01~1.21명	150%	3유형	1.32~1.52명	150%	3유형	1.21~1.41명	225%	4유형	1.52명 이상	200%	4유형	1.41명 이상	300%
유형	합계출산율	반영률	유형	합계출산율	반영률																										
1유형	0.92~1.12명	50%	1유형	0.81~1.01명	75%																										
2유형	1.12~1.32명	100%	2유형	1.01~1.21명	150%																										
3유형	1.32~1.52명	150%	3유형	1.21~1.41명	225%																										
4유형	1.52명 이상	200%	4유형	1.41명 이상	300%																										
지방재정 건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는 과감한 특전(인센티브)을 제공, 방만하게 운용하는 지자체에는 감액(페널티) 부여</li> <li>- 과도한 현금성 복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위단체와 비교하여 현금성 복지를 절감한 경우 특전(인센티브)을, 과다 지출할 경우 감액(페널티) 부여</li> <li>- 자율적 인력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인건비를 절감한 경우 200% 특전(인센티브)을 부여,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여 인건비를 지출하는 경우 초과한 인건비만큼 감액(페널티)</li> </ul>																														

## 고용부,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 발표

지역산업고용정책과. 2022.10.08.



고용노동부는 10월 7일 울산광역시청에서 개최된 '제2회 중앙지방 협력회의'에서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은 최근 국가적 문제로 심화되고 있는 '지방 소멸 위기'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지역의 좋은 일자리 부족'에 있다는 인식하에, 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진단하고 적합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일자리사업 체계를 혁신함으로써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중앙정부 주도의 일자리 정책 및 사업 분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일자리맵(MAP)'을 구축하여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을 비롯해 투자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공</li> <li>- '지역고용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이를 중앙정부와의 협력과 소통을 위한 일자리 핫라인으로 활용할 계획</li> <li>- '지역 주도 일자리사업'을 체계화하고 확대하여 지역의 주력 산업 일자리창출 및 신산업 육성 적극 지원 * 특히, 내년에는 '플러스+사업'을 신설하여 기존 정부 사업의 지원 요건을 맞춤형으로 조정하고, 정부예산을 활용하여 추가 지원 계획</li> </ul>
지역 고용 위기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과 기업에게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 '산업구조변화 특화훈련', '노동전환장려금' 등을 통해 근로자의 직무전환 등 중점 지원</li> <li>- '고용위기지역' 제도를 지역별 위기특성 등을 고려한 단계별 지원체계로 전환하여 고용 위기 발생 지역의 신속한 극복을 지원 계획</li> </ul>
지역 주도의 일자리 창출 기반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역고용의 중장기 발전 토대를 마련</li> <li>- 지역 내 모든 일자리사업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는 등 자치단체의 일자리 책임행정 강화</li> <li>- 자치단체의 일자리사업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컨설팅과 교육 등 지원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평가시스템 도입 계획</li> </ul>

서울특별시, '동서울터미널' 최고 40층 광역교통 복합공간으로, 사전협상 착수  
 공공개발기획담당관. 2022.10.04.

건축 정책 도시 정책  
 문화 관광

1987년 문을 연 이래 35년 간 운영되면서 시설 노후화, 주변 교통난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광진구 '동서울터미널'이 최고 40층 높이의 광역교통 중심 복합공간으로 대변신한다.

우선, 심각한 시설 노후화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터미널은 현재 지상 1층에 있는 승하차장과 주차장을 지하화(지상1층~지하3층)하고, 현대화된 터미널로 조성한다. 터미널 규모도 현재의 120% 이상으로 확보해 혼잡을 크게 줄인다.

'신세계동서울PFV'는 사전협상 제안서를 통해 '동서울터미널'을 서울 동북권 광역교통 중심지이자, 지역발전을 이끄는 한강변 랜드마크 크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복합개발 계획\*을 제안했다.

\* 연면적 35.7만㎡(토지면적 36,704㎡), 최고 40층(197.5m, 건폐율 59.03%, 용적률 374.46%)에 터미널(지하3층~지상1층, 전체시설의 30%)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을 복합화

또한, 서울특별시는 현재 버스터미널 단일 용도로만 활용되고 있는 해당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논의할 예정이다.



[동서울터미널 개발 제안(안)]

## 광주광역시, 도시이용인구 3천만 시대 개막 위한 '신활력 전략계획' 수립 착수

신활력총괄관실. 2022.10.18.



광주광역시는 도시활력 제고를 위해 민선8기 역점 과제선정 및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광주만의 스토리를 담은 도시 신활력 강화전략 계획을 수립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어 그동안 광주에 부족했던 요소들을 분석해 재미, 활력, 기회를 제공하고 사람들을 끌어 들일 수 있는 중·장기 전략과 정책 등 로드맵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실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공공건축물 설계자 선정을 위한 기준 개정(안)]

구분	주요 내용
FESTA CITY GWANGJU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토리텔링 관광 콘텐츠 개발 및 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li> <li>- 분산된 축제를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고 시즌별 스토리·테마·색깔을 입히는 축제브랜딩* 작업도 병행</li> <li>* 축제를 4계절 특색에 맞게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광주비엔날레, 광주프린스페스티벌 등 시민통합축제</li> <li>- 여름: Street Festa, Beer Festa, 대인예술시장 등 여름밤 축제</li> <li>- 가을: 미디어아트페스티벌, 홍강축제, 버스커즈월드컵 등 풍성한 거리축제</li> <li>- 겨울: 세계김치축제, 양림 크리스마스 축제 등</li> </ul> </li> </ul>
복합쇼핑몰 유치 등 신활력 프로젝트 착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 도시이용인구 3000만 시대 개막의 앵커역할을 수행할 광주복합쇼핑몰 유치 준비</li> <li>- 도시 주요거점을 중심으로 5대 신활력벨트*를 조성하고 도시재생, 창업지원, 문화콘텐츠 등과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li> <li>* 영산강·황룡강 익사이팅벨트, 광주천 생태힐링벨트, 송정역 활력벨트, 광주역 창업벨트, 호천역 디지털 콘텐츠벨트</li> <li>- 새로운 영산강 시대를 열기 위해 인문학적 가치와 친환경적 가치를 담은 Y벨트 익사이팅 문화·관광자원 구축용역 진행 중</li> </ul>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과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에는 호남권 최대창업단지가 들어서며 스타트업 기업들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li> <li>- '기관·단체 대상 찾아가는 간담회', 'MZ세대 공직자들과 캐주얼 회의', '민·관 신활력 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활용해 신활력 시책 개발</li> <li>- 광주폴리는 5차 폴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존 31개 폴리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한 폴리 신활력 프로젝트도 구상</li> </ul>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이 행복한 제주 숲 만들기 추진계획(22~26)' 발표

산림휴양과. 2022.10.05.



제주특별자치도는 숲의 다양한 혜택이 도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다양한 도시숲을 확대 조성하기 위한 '도민이 행복한 제주 숲 만들기 추진계획'을 5일 발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이 행복한 제주 숲 만들기 추진계획'을 통해 2022~2026년 5년간 663억 원(국비 264·도비 399)을 투입하고 6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 「도민이 행복한 제주 숲 만들기 추진계획」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도시숲 등 그린인프라 체적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바람길숲, 복지시설 나눔숲, 녹색쌈지숲, 생활밀착형 숲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 확충을 위해 228만 5,000본 식재 계획</li> <li>- 도로변 안전지대, 중앙분리대 등 자투리 공간을 찾아 숲으로 조성하고, 제주도 도화(道花)인 '참꽃나무' 자생지 내 복원 시험 식재해 명소 조성 계획</li> <li>- 서귀포시 상생의 정원, 제주도청 실내·옥상정원 등 조성</li> </ul>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부터 제주시 서부공원에 기후대응 도시숲 8만㎡ 조성을 시작으로 공원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li> <li>- 도심지 온실가스 흡수 및 도시열섬 완화를 위해 매입된 장기 미집행공원에 연차적으로 23만 1,000그루를 식재 계획</li> </ul>
도시 외곽 산림의 건강성 및 경관 유지·증진을 위한 공익조림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유림·공유림 등 720만㎡에 나무심기를 추진 계획</li> <li>- 제주 삼나무 조림지에 대한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숲가꾸기 및 대체수종 식재로 숲 개선</li> <li>- 표고자목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공유림 내 표고자목용 상수리나무 심기, 사유림 내 신약개발 생산을 위한 약용수 심기 등 지역 특화 나무심기도 추진</li> </ul>
시민 참여 도시녹화 운동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에서 노년까지 생애주기별 내 나무 갖기, 마을정원 만들기 등을 통해 도민과 함께 녹색제주 만들기 실현 계획</li> <li>- 교육기관과 협업해 학교림, 교육청소관 공유지를 활용한 정원 조성, 나무심기 등을 통해 학생들의 정서 함양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문화 공간으로 활용 예정</li> </ul>
외곽 산림과 도시 그린 인프라 연결축 역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지대를 단열·단층구조에서 다열·복층구조로 확대 조성하고 미세먼지 흡착 등 도로변 대기정화를 위한 생육환경을 개선하며, 띠녹지를 확대할 예정</li> <li>- 기로수 단절 지역을 연결하고, 핵심가점을 연결 축으로 도시림 네트워크를 구축</li> </ul>

# 건축·도시분야 사업추진 동향



## 국토부,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주택기금과. 2022.10.03.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를 10월 4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그동안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7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던 것을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한도 역시 수도권 2억원, 지방 1.6억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인상하고 대출대상이 되는 주택의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 결혼 후 대출한도가 더 유리\*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롭게 도입된다.

\*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한도는 1.5억, 신혼부부는 2.7억

아울러, 최근 급등하는 금리로 인한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이용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10월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22.7.7 발표)」 및 「새 정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22.7.18 발표)」

[전세대출 한도 확대 변경 주요 내용]

구분	청년		신혼부부			
	기존	변경	수도권		지방	
			기존	변경	기존	변경
대출한도	0.7억	2억	2억	3억	1.6억	2억
보증금 상한	1억	3억	3억	4억	2억	3억

## 국토부,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 추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2.09.01.

건축  
정책

주택  
정책

도시  
정책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22.9.7. ~ 23.)을 거쳐 주택사업 규제 완화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사업 규제 완화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 개선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감리 절차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리자 모집공고 및 적격평가결과 차순위자에 의한 이의제기 등으로 인해 주택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감리자 지정기한 명시'</li> <li>* 감리자 지정권자(지자체)는 이의제기 발생 시 책임문제 등의 우려로 기한 없이 감리자를 지정(확정)하지 않아 공사 착공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li> <li>- 감리자 지정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60일 내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li> <li>-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 감리자 지정권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사후보고로 대체 가능</li> <li>- 감리자 적격심사 시, 감리자의 업무충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1,000세대 이상의 사업장에 배치해야 하는 신규감리원의 경력기준 완화</li> </ul>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준 등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개발사업 시, 상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 마련</li> <li>- 상가세입자의 영업손실 보상액 감정평가 시, 보상액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기하고 이를 상가세입자에게 통보하고, 법령에서 정한 영업손실 보상액 기준에도 불구하고, 정비조합과 상가세입자가 보상협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li> <li>- 도시정비사업에서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제정</li> <li>- 지역별로 상이하거나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문제점을 해소하여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부담 경감</li> </ul>
건축 분야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내 건축물 건축 시,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정북(正北)방향'과 '정남(正南)방향' 중 선택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li> <li>- 지자체가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해야 하는 건축 분야 필수 전문가의 범위를 전문가 인력현황*을 고려하여 확대</li> <li>* 건축사 18,335명, 건축구조기술사 1,220명, 건축시공기술사 10,273명</li> </ul>

그 밖에도,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을 완화\* 등의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한다.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자산관리회사를 법인이사로 두는 경우, 주택 건설사업자 등록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

## 국토부, '2022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경남 진주시 등 14개 도시 선정

도로정책과. 2022.10.18.



국토교통부는 10월 18일 종로구민회관에서 '2022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에서 규정한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지자체에 대해 매년 수여해왔다.

\*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있는 발전,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토지이용효율성, 생활공간안전성·쾌적성·편의성 등과 생활인프라의 적정성·용이성·접근성·편리성 등을 평가

올해 도시대상은 포용사회, 삶의 질 향상, 깨끗한 환경 등을 추구하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가 반영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국토교통부장관상 등 도시 14곳이 선정되었다.

\* 국제적 합의이행과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포용사회, 삶의 질 향상, 깨끗한 환경, 국제평화와 협력 강화)하기 위한 목표(17개 목표에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포함)

### [2022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선정결과]

종류	시상규모	수상 지자체		
대통령상 (종합순위)	1점	경남 진주시		
국무총리상 (종합순위)	1점	경기 부천시		
국토교통부 장관상 (분야별 순위)	15점	분야	대도시	중소도시
		도시사회	부산 수영구	전남 목포시
		도시경제	대전 서구	경북 경주시
		도시환경	경기 시흥시	전북 완주군
		지원체계	부산 해운대구	경기 파주시
		도시재생 인구감소	광주 북구	충북 충주시
		기후변화 재난대응	서울 도봉구	-
		첨단도시	서울 성동구	-

## 국토부,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최초 준공지구 탄생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2.10.23.

건축  
정책

주택  
정책

도시  
정책

국토교통부는 10월 21일(금) 부천원종 가로주택정비사업(경기도 부천시 원종동 295-1번지 일원)이 준공하여 입주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하나로, LH참여형으로는 최초로 준공되는 사업지구이다.

부천 원종지구는 이번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기존 66세대의 다세대 주택에서 조합원분양 65세대, 일반분양 44세대, 임대주택 28세대로 총 137세대의 지상 13층 아파트로 재탄생하였다.

특히, 저층 커뮤니티 공간계획 및 다채로운 입면계획 등을 통해 입주민을 위한 경로당, 공용회의실 등 내부시설과 다양한 외부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주민광장(평상시 주차장 활용)까지 조성하여 외부와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본 사업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LH가 참여하여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며, 이 덕분에 사업추진이 다소 더뎠던 부천 원종지구가 '17년 LH가 참여한 이후 조합설립(18년 3월)부터 준공까지 4년 7개월이 소요되어 기존 대규모 정비사업 대비 사업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부천시 원종동 사업지구 경계]

[부천시 LH가로주택 정비사업 준공 후]

## 행안부, 서울 용산 이태원 사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복구지원과. 2022.10.30.

국토  
정책

안전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이태원 일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사고와 관련하여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0.30) 오전 9시 45분 국정 최우선 순위를 이태원 사고의 수습과 후속조치에 두겠다는 담화문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회재난으로는 11번째 사례\*다.

\* 삼풍백화점 붕괴('95), 대구지하철 방화사건('03),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07), (주)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12),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14), 코로나19('20) 등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사망자 유족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게 되며, 피해 수습·지원은 재난피해자 주민등록부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망하신 분들 중 아직까지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분들의 신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번 사고로 큰 충격을 받으신 사상자 가족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등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고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 문체부, 국제회의복합지구, 국제회의집적시설로 지정받을 지자체와 시설 공모

융합관광산업과. 2022.10.04.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국제회의산업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혁신으로 완화된 지정 기준에 따라 국제회의복합지구와 국제회의집적시설로 지정받을 지자체와 시설을 공모한다. 지정 신청은 10월 4일(화)부터 11월 1일(화)까지 접수한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 수’가 급감\*함에 따라 복합지구 추가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현실적으로 복합지구로 지정을 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지역과 현장 의견을 수렴해 규제혁신 차원에서 지난 8월 2일(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9월 20일(화)에 관련 고시를 제·개정했다.

\*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 수[2020 마이스(MICE)산업 통계: '19년 790,949명 → '20년 28,244명(96.4% 감소)]

###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외국인 국제회의 참가 감소 등 현장 요구 반영해 규제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합지구 지정요건 중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 수’ 기준*에서 ‘복합지구 지정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3년간 평균 5,000명 이상’을 적용할 때, 「재난기본법」상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기간(2020년, 2021년)에는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가중치를 곱해 계산할 수 있도록 조정</li> <li>*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복합지구 지정 대상 지역 내 개최 회의에 참가한 외국인이 전년도 기준 5천 명 이상 또는 직전 3년간 평균 5천 명 이상</li> <li>- 숙박시설, 공연장 등의 집적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li> <li>* 집적시설 기준 완화: 관광숙박업상 숙박시설 기준(100실) 적용 시 4, 5성급 호텔의 경우 30실 이상에도 적용토록 하고, 공연장 시설 기준도 완화(500석 이상 → 300석 이상)</li> <li>** 집적시설 대상 확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 문체육시설을 고시에 규정</li> </ul>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시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 관광기금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합지구 내 국제회의시설 및 집적시설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받고,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사업 평가를 통해 관광기금 지원**</li> <li>* 부담금 감면: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li> <li>**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관광기금): '22년 20억 원(5개소) → '23년 28억 원(정부예산안)</li> </ul>

## 문체부, 지자체 대상으로 '2024년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 공모

국제문화과. 2022.10.28.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28일(금)부터 11월 28일(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동아시아 지역문화 매력 확산에 동참할 '2024년 동아시아문화도시'를 공모한다.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은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2012년) 합의에 따라 2014년부터 매년 각 나라의 문화적 전통을 대표하는 도시를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해 다양한 문화교류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8월 26일(금)에 열린 제13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는 한국 전주시, 중국 청두시·메이저우시, 일본 시즈오카현을 '2023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포한 바 있다.

'2024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지자체는 2024년 한 해 동안 중국과 일본의 동아시아문화도시와 함께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교류하면서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홍보하고 국제문화교류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된다. 문체부는 문화·예술·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동아시아문화도시의 주요 선정기준은 ▲도시 역량, ▲사업 추진 계획, ▲지역문화 발전 계획, ▲재원 조달 계획 등이다. 응모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응모 요령을 참고해 11월 28일(월)까지 문체부에 지자체장 명의 공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12월 중에 심사를 거쳐 '2024년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현황]

- '14년 : 광주, <b>요코하마</b> , 취안저우	- '15년 : 청주, 니카타, <b>칭다오</b>
- '16년 : <b>계주</b> , 나라, 닝보	- '17년 : 대구, <b>교토</b> , 창사
- '18년 : 부산, 가나자와, <b>하얼빈</b>	- '19년 : <b>인천</b> , 도쿄 도시마구, 시안
- '20년 : 코로나19로 미개최	- '21년 : 순천, <b>기타큐슈</b> , 사오상·둔황
- '22년 : 경주, 오이타현 원저우지산	- '23년 : <b>전주</b> , 시즈오카현, 청두·메이저우

\* 진한 글씨체는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개최 장소

## 행복청, 세종~공주 광역 비알티(BRT) 2025년 운행

교통계획과. 2022.10.0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공주시는 세종~공주 광역 비알티(BRT) 사업 추진 개발계획이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개발계획에 따르면 세종~공주 광역 비알티(BRT) 노선의 총 길이는 18.5km이며 사업비는 17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 노선은 ‘세종시 한별동~세종충남대병원~정부세종청사~국도36호(서세종 나들목(IC))~공주 신관초교~변영1로~신관 중앙교차로~공주종합버스터미널’이며, 12개 지점(24개소)의 정류장을 경유할 계획이다.

세종~공주 광역 비알티(BRT) 노선은 비알티(BRT) 전용차로 비율이 97%에 달해 기존에 세종과 공주 간 운행중인 기존 노선 버스 대비 통행속도는 19.8km/h에서 27.9km/h로 8.1km/h가 빨라지고, 이동시간도 기존 57분에서 39분으로 약 20분 가량 줄어들어 신속성과 정시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와 함께, 출퇴근 시간에는 배차간격을 8분 이내로 계획하고, 첨단기능과 편리성을 갖춘 정류장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리성을 높이고 품격높은 교통 기반이 마련되어 광역교통 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공주 광역 BRT 운행 노선도(안)]

## 서울특별시, '송현동 부지 한 세기 만에 시민 품, '24년 12월까지 약 2년간 임시개방

공공개발기획담당관. 2022.10.06.

건축  
정책

도시  
정책

환경

문화  
관광

서울특별시는 서울광장 면적 3배에 달하는 송현동 부지(37,117㎡) 전체를 '쉼과 문화가 있는 열린송현녹지광장'으로 단장을 마치고, 7일(금) 17시 30분부터 일반시민에게 임시개방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는 임시개방인 만큼 인위적인 시설을 설치하기보다는 넓은 녹지광장에 최소한의 시설물만 배치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회색빛 빌딩 숲의 얼굴을 바꿀 '녹지생태도심'의 시작으로 서울 도심 일대에 대규모 녹지를 확보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시개방 이후 2025년부터는 송현동 부지를 '(가칭)이건희 기증관'을 품은 '(가칭)송현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송현동 부지를 대한민국 문화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대표 문화관광명소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현재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상태로,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하나의 공원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통합설계 지침을 정하고 내년 상반기 국제현상공모를 통해 통합 공간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5년 1월 착공해서 2027년 '(가칭)이건희 기증관'과 공원을 동시에 완공해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건희 기증관을 품은 송현문화공원 조감도 기획(안)]

## 서울특별시, 폐현수막 재활용 건축자재로 남산도서관에 친환경 독서공간 조성 자원순환과. 2022.10.20.

건축  
정책

환경

문화  
관광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한 폐현수막 및 롯데홈쇼핑의 폐의류를 건축자재로 활용한 남산도서관의 친환경 시민휴식공간인 ‘남산하늘뜰’이 준공됐다. 개관식은 10월 20일(목) 10시 남산도서관에서 개최됐다.

서울특별시는 지난 5월 19일(목) 한국환경공단, 롯데홈쇼핑,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남산도서관 5층 세미나실에서 ‘자원순환 및 사회가치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폐현수막 및 폐의류를 건축자재로 활용한 남산도서관 친환경공간 조성사업에 참여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지자체 연계 폐현수막 수거 운반 지원, 사업 홍보, ▲기업 사회가치경영 실현을 위해 폐현수막을 활용한 남산도서관 친환경 공간 조성, ▲재활용제품을 이용한 환경교육 지원 등이다. 각 기관은 지난 5월부터 설계, 시공, 준공에 이르기까지 남산하늘뜰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해왔다.

서울특별시는 협약체결 후 친환경 건축자재를 만들기 위한 현수막을 제공할 수 있는 자치구를 조사했고, 금천구로부터 2,540장의 현수막을 제공받았다. 현수막 외에도 롯데홈쇼핑에서 발생한 폐의류 22,860장을 활용해 건축자재를 제작하였으며, 시민들이 편히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의자, 탁자 등으로 재탄생시켰다.



[남산하늘뜰 시설 조감도]

[남산하늘뜰 히스토리얼]

## 서울특별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26곳 선정

전략주택공급과. 2022.10.21.



지난 6월,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인 모아타운 대상지 21곳을 선정한 데 이어 하반기 2차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두 차례의 공모를 완료, 내년부터는 모아타운 사업이 탄력을 받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는 20일(목) 열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반 지하 주택, 침수피해 여부, 대상지별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을 비롯한 심사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 접수된 39곳 중 26곳을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2022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결과 (26개소)]

자치구	대표번지	면적(㎡)	자치구	대표번지	면적(㎡)
용산구	원효로4가 71일원	24,962	마포구	합정동 369 일원	90,243
성동구	응봉동 265 일원	37,287	마포구	중동 78 일원	70,515
광진구	자양4동 12-10 일원	75,608	강서구	공향동 55-327 일원	96,903
중랑구	면목동 152-1 일원	88,040	강서구	화곡6동 957 일원	96,165
중랑구	면목동 63-1 일원	76,584	구로구	개봉동 270-38 일원	38,627
성북구	석관동 334-69 일원	74,114	금천구	시흥1동 864 일원	74,447
성북구	석관동 261-22 일원	48,178	금천구	시흥3동 950 일원	58,867
강북구	번동 411 일원	79,218	영등포구	도림동 247-48 일원	92,057
강북구	수유동 52-1 일원	73,549	영등포구	대림3동 786 일원	24,064
노원구	월계동 500 일원	85,165	동작구	노량진동 221-24 일원	31,783
노원구	월계동 534 일원	51,621	동작구	사당동 202-29 일원	84,311
은평구	불광동 170 일원	51,523	관악구	청룡동 1535 일원	92,871
은평구	대조동 89 일원	40,848	강동구	천호동 113-2 일원	55,521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된 26곳은 각 자치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서울특별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신청 규모 2만㎡ 미만' 지역의 경우 개별 모아주택 사업으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에 맞춰 세부 운영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26년까지 노후경로당 321개소 저탄소 친환경건물로 전환

친환경건물과. 2022.10.25.

건축  
정책

환경

서울특별시가 노후경로당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저탄소 건물 확산 사업을 추진한다. '26년까지 5년간 총 560억 원을 투입해 321개소의 에너지 성능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서울지역 온실가스 배출의 69%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물 부문의 감축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기후변화 취약계층인 어르신이 이용하는 공공건물의 실내 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바꾼다는 목표다.

서울특별시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공사를 시작해 2022년 현재 경로당 총 18개소가 준공되었다. 이에 18개소에서 연간 약 8천 4백만 원의 전기요금 절감(연간 약 764,498kWh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경로당의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친환경 설계기법을 적용해 시설환경을 개선하는 '경로당 제로에너지 전환사업'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 자립률을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는 2023년부터는 경로당 건물의 상태에 따라 맞춤형 에너지 성능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로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되 제로에너지 건물로 전환이 어려운 곳은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해 단열창호, 고효율 기자재 등 교체하는 BRP사업으로 지원 예정이다.

2022년 공사를 완료한 3개 경로당은 ▲서대문구 백련경로당, ▲서대문구 신촌경로당, ▲노원구 하계경로당으로, 3곳 모두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이상을 획득했다. 특히, 백련경로당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에너지 자립률 71%를 확보했다.

## 서울특별시, 천왕근린공원에 메르세데스-벤츠와 '도시숲' 조성 완료

공원조성과. 2022.10.26.



서울특별시는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와 함께 천왕근린공원에 도시숲을 완공하고, 10월 26일 구로구 주민, 서울시 직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및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 KCC오토 임직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민간참여 녹화사업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녹화 사업은 서울특별시가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과 지난 4월 체결한 '그린플러스(GREEN+) 도시 숲 프로젝트'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기후 위기 대응 및 도심 속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공원 내 사유지 보상토지 네 곳에 도시 숲 등을 조성하게 된다.

프로젝트의 첫 번째 대상지인 천왕근린공원은 올해 상반기부터 녹화 및 정비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약 6개월 만에 도시숲을 완성하고 프로젝트의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천왕근린공원 내 조성한 도시 숲은 총 1,500㎡ 규모로, 팔배나무 등 3,410주가 식재되어 연간 2,292kg의 이산화탄소와 121kg의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122,322kg의 산소를 생산하게 된다.

업무협약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도시숲 부지를 제공하고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본 프로젝트 총괄 및 기부금을 조성하여 임직원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한 사후관리를 지원하며,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에서 본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기업 입장에서 도시녹화 분야의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이미지 향상 효과도 있어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대구광역시, 여성이 안전한 골목길 만든다

여성가족과. 2022.10.23.



대구광역시는 대구행복진흥원(여성가족본부), 대구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원룸, 다세대주택 등 여성 1인가구가 밀집되어 있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선정해 여성이 안전한 골목길을 조성했다.

최근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대구광역시는 2020년부터 ‘여성 1인가구 안전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매년 여성 거주비율이 높고 범죄발생 건수가 많은 지역을 선정해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을 실시했다.

안전환경 조성이 필요한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곳에는 어두운 골목을 밝히기 위해 바닥에 솔라표시등을 설치하고, 골목 내 벽면에는 벽부등을 설치해 전체적으로 조도를 높였다. 그리고 교차로에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안심거울을 설치했으며, 고유 캐릭터로 제작된 시트지를 전봇대에 랩핑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고자 노력했다. 또한, 전봇대 지점별로 일련번호를 배정해 112 신고와 연계하는 등 위치확인이 간편하게 이루어져 경찰출동이 용이하도록 했다.

올해 조성된 ‘초롱길’은 화원의 특산물인 수박을 모티브로 한 초롱이를 캐릭터로 만들어 손에 초롱을 들고 어두운 골목길을 밝히고 안내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 대전광역시, 보문산에 남겨진 1930년대 별장건축, 대전시 문화재 등록 예고

문화유산과. 2022.10.26.

건축  
정책

문화  
관광

대전광역시에서는 오늘 10월 24일 보문산공원에 있는 옛 보문사(寶文寺) 요사채에 대한 문화재 등록을 예고했다.

이 건물은 최근까지 보문사라는 사찰의 승방으로 사용되었으나, 일제강점기인 1931년 대전의 재조일본인(在朝日本人) 쓰지 만타로(辻萬太郎, 1909~1983)가 지은 가족 별장이었다.

건축주인 쓰지 만타로는 1905년 대전에 정착한 쓰지 긴노스케(辻勤之祖)의 아들로 1909년 대전에서 출생했으며, 지금의 대전 동구 원동에 있던 후지추양조공장을 전국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대전세종연구원의 2015년 정책보고서에 수록된 임상일 교수(대전대 경제학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쓰지 부자는 한국인 노동자들을 가혹하게 착취한 군시제사공장의 자본가 나가노(長野幸助)와 달리 대전을 자신의 고향처럼 생각했으며, 한국인들과의 관계를 중시한 친조선인적인 경영철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현지조사에 참여한 황민혜 박사(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는 “1920년대 문화주택의 건축적 요소와 그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건축물로 대전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희소성이 있는 중요한 문화재”라며 등록 가치를 설명했다.

보문산 근대식 별장은 30일간의 등록 예고 기간 동안, 추가조사와 함께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등록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대전 보문산 근대식 별장 (좌: 현재모습, 우:1930년대)]

## 전라북도, '2023년 예쁜간판 꾸미기' 공모사업 전주, 익산, 남원 3개 시·군 선정

주택건축과. 2022.10.27.

건축  
정책

도시  
정책

전라북도는 노후하고 불량한 간판을 지역 특성과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간판으로 정비하고, 도시미관 창출을 위한 '2023년 예쁜간판 꾸미기' 공모사업에 전주, 익산, 남원 3개 시·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3년 예쁜간판 꾸미기'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6일까지 시군 공모를 추진하여, 사업계획, 주민참여, 지역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대상을 선정했으며, 최종 선정된 3개소는 전주 '객리단길 예쁜간판꾸미기 사업', 익산 '동서로 골목음식점 특화거리 예쁜간판꾸미기 사업', 남원 '향교동 동림로 간판개선사업'이다.

'예쁜간판 꾸미기' 사업은 업소의 이미지 향상과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살린 작고 아름다운 간판으로 재설치하고 옥외광고물법에 맞게 광고물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시군 공모를 통해, 9개 시군 18개소에 4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도 남원시 김제시 2개 시군에 총 6억 원을 투입하여 아름다운 도시미관 창출에 힘쓰고 있다.

앞으로, 선정된 시군에서는 23년 초 간판디자인 설계 후, 간판 제작·설치를 내년 11월까지 추진하며, 사업완료 후에도 정비시범구역 지정, 간판 디자인 경유제를 통한 사후관리로 사업효과를 한층 더 높일 계획이다

## 전라남도,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 추진

일자리경제과. 2022.10.05.

국토  
정책

도시  
정책

전라남도는 청년의 뜨거운 열정과 지역 자원을 활용해 전남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 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들이 팀을 구성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100팀(150명 이내)을 선정, 2024년까지 3년간 도내에서(16개 군) 창업하도록 최대 7천만 원을 사업화 자금으로 지원한다.

1단계에서는 팀당 100만 원의 경비를 지원해 지역 활동 조사를 하고, 2단계에서는 사업 아이템 평가를 통해 50팀을 선정, 최대 2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차등 지원한다. 3단계에서는 2차에 선정된 우수 아이템 사업화 지원 대상 중 최종 25팀을 선정해 최대 5천만 원의 사업 고도화 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지원 대상자에게는 창업 준비 시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창업 교육, 멘토링, 전문 분야 특강 등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체계적 온 오프라인 교육을 한다.

최정은 전라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전남의 농수축산물 등 풍부한 지역자원이 창업의 새 아이템으로 활용돼 청년이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창업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지역을 활성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전라남도, 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6개 시군서 추진

농업정책과. 2022.10.23.

건축  
정책

주택  
정책

도시  
정책

전라남도는 농촌 난개발 지역을 새롭게 단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농촌공간정비사업 3차 공모에서 3개 시군이 선정돼 총 6개 시군에서 5년간 농촌공간 재생사업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차 공모에서 화순군 250억, 장흥군 120억 원 규모의 사업이, 8월 2차 공모에서는 해남군 50억 원 사업이, 이번 3차 공모에서 나주시 230억, 강진군 55억, 무안군 52억 원 사업이 각각 선정돼 전국(33지구)에서 경상남도(12지구) 다음으로 2번째로 많은 사업지구를 확보했다.

선정된 6개 시군은 올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이후 시행계획 수립, 실시설계, 공사 착공 등을 거쳐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지역 난개발에 따른 축사, 공장, 태양광, 빈집, 폐창고, 장기방치 건물 등 유해시설을 철거하고 그 공간에 주거단지 및 마을공동시설, 경관 개선 등 농촌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아름다운 마을을 조성, 쾌적한 마을 환경으로 바뀔 전망이다.

10월 말에는 시군 공무원 및 용역사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해 2023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참여도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 경상북도, 구미·문경·예천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조성

농업정책과. 2022.1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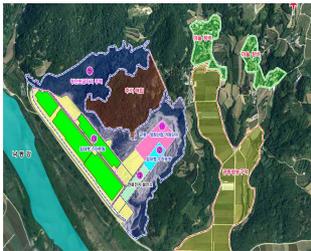


경상북도는 지난 25일자로 구미시, 문경시, 예천군을 내년도 ‘경북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조성지역으로 선정했다.

선정 지역에는 공동영농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공동급식시설이 기본 지원되고 첨단시설(시설원예, 곤충), 가공시설·장비, 청년 주거공간 및 브랜드개발지원 등 농식품부 또는 자체사업이 패키지로 지원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3개 지역은 혁신 농업타운 조성 취지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계획의 실현가능성, 구체성과 타당성, 지역 자원 및 농업인과의 연계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대상지역 주요 내용]

지역	구상도	주요 내용
예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기간) 2023~2025년</li> <li>- (유형) 종합형(첨단농업+공동영농)</li> <li>- (위치) 지보면 매창리 일원</li> <li>- (면적) 53.8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단단지 14.8, 공동영농 18.8</li> </ul> </li> <li>- (공동영농 품목) 벼</li> <li>- (참여농가) 54농가</li> <li>- (주요내용)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형수직농장, 곤충·양잠 산업 거점단지, 청년보급자리, 공동영농시설·장비 등</li> </ul>
문경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기간) 2023~2024년</li> <li>- (유형) 소득혁신형</li> <li>- (위치) 영순면 울곡리 일원</li> <li>- (면적) 116ha</li> <li>- (공동영농 품목) 콩, 양파</li> <li>- (참여농가) 80농가</li> <li>- (주요내용) 육묘장, 선별장, 공동영농장비, 청년농 교육장, 공동급식시설, 등</li> </ul>
구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기간) 2023년</li> <li>- (유형) 공동영농형</li> <li>- (위치) 무을면 웅곡리 일원</li> <li>- (면적) 30ha</li> <li>- (공동영농 품목) 벼(특수미, 분질미)</li> <li>- (참여농가) 80농가</li> <li>- (주요내용) 가공시설, 저온저장고, 농기계창고, 공동영농장비, 브랜드개발 등</li> </ul>

## 경상북도, '경북형 소규모마을 활성화 시범사업' 5개 마을 추진

인구정책과. 2022.10.27.



경상북도는 마을의 기능을 회복하고 주민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지역사회 활력을 도모하고자 올해부터 ‘소규모마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경상북도에서는 인구감소 위기의 최전선인 소규모마을을 대상으로 샵터-일터-쉼터로서 마을 공간 변화를 통해 주민이 살기 좋고 외지인이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

‘경북형 소규모마을 활성화 사업’은 기존 읍·면 단위의 농촌활성화 및 정주기반 구축 정책들과 연계해 인구유입 측면을 강조한 소규모 마을 단위의 마을살이에 역점을 뒀다.

우선 도내 5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20억 원(개소당 4억)을 투입해 2023년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경북형 소규모마을 활성화 시범사업' 주요 내용]

지역	주요 내용
포항시 봉산마을	마을 농산물 활용 뉴트로 방앗간 및 팍카페 마련, 청년창업가와 함께 먹거리&밀키트 개발, 봉산마을썸 로컬클래스 브랜딩 등
영주시 하늘꽃마을	산촌유학 커넥트센터 마련 및 테마별·계절별 다양한 산촌살이 프로그램 운영
문경시 신현1리 마을	마을+지역 청년단체 협업, 시골마을 게스트 하우스 운영, 지역 농산물 활용 마을밥상 레시피 개발 등
봉화군 양삼마을	시골 유학생 및 부모를 위한 엄마품 하룻밤센터 마련, 마을 어르신 참여 프로그램 및 로컬푸드 제공 등
의성군 선창마을	마을 전통주 상품화 시설 마련, 할머니 손그림 디자인화 및 상표화 등 마케팅 추진, 어르신 공동돌봄 운영 등

앞으로 이번 시범사업과 연계해 지역 경쟁력 강화와 지역 발전을 주도하고 견인할 경북형 로컬크리에이터 및 마을 활동가 등 인재양성을 통해 주민 주도 마을생태계 조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 하반기 경북형 소규모마을 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여 소규모마을 역량단계별 지원체계 구축하고 소규모마을 인구유입 모델을 개발해 도내 확산을 추진할 방침이다.

## 경상남도, 10월부터 3개월간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대상 종합진단

도시계획과, 2022.10.17.

도시  
정책

경상남도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에 대해 올해 상반기 종합진단을 실시한 데 이어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주관으로 하반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운영 실태점검을 10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까지 준공됐거나 준공 예정인 시설은 123곳이고, 이 중 63곳에 대해 현장점검 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이용시설 실태점검에서는 도내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준공 이후 운영 관리현황과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와 의견을 수렴해 공동이용시설 이용 활성화 및 운영관리 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상반기 종합진단 결과 운영 개선이 필요한 시설과 신규 준공된 시설을 중심으로 ▲공동이용시설 활성화를 위한 자체 조치사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지원사업 현황, ▲공동체 자생 방안, ▲도시재생 플랫폼 정보 연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며, 특히 국토부에서 제공한 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계획을 통해 시설 및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경상남도, 남해군 이어마을, 전국 유일 '일등어촌' 선정

어촌발전과. 2022.10.31.



경상남도는 전국 어촌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어촌관광사업 등급 평가 최종심의 결과, 전 부문에서 1등급을 평가받은 '일등어촌'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해군 이어마을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어촌관광사업 등급 제도는 어촌관광 서비스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도 높은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관광시설과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15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121개 어촌체험휴양마을 중 등급평가 신청한 56개소에 대한 현장심사를 진행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44개 마을에 최종 등급을 부여했다. 남해군 이어마을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 부문 1등급을 받아 '일등어촌'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외에도 남해 문항마을은 '체험부문 우수마을'로 선정되었으며, 거제 산달도 마을은 '숙박부문 우수마을'로 선정되었다.

이어 '어촌체험휴양마을'은 남해군 고현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썰물 때 드러나는 넓은 갯벌과 산, 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마을 내 정자와 벤치, 해안데크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쪽 잡이, 굴 채취, 전어 잡이, 통발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숙박시설과 식당도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아시아 최초 국제안전도시 4차 공인 확정

소방정책과. 2022.10.18.

국도  
정책

도시  
정책

안전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ISCCC)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근 국제안전도시 승인을 최종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7년 국제안전도시로 최초 공인된 이래 2012년 2차, 2017년 아시아 최초 3차 공인에 이어 올해 4차 공인 인증을 위해 총력을 펼친 결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는 제주에서 국제안전도시 공인 이후 사고손상 사망자가 획기적으로 감소\*한 것을 주목하는 한편, 국내 유일의 손상감시 시스템의 활용 가치와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 평가했다.

\* 인구 10만 명 당 사고손상 사망자 : 2007년 80명 → 2021년 56.5명(29.4% 감소)

또한, 120개 사고손상 예방프로그램 운영 등 도내 45개 안전관련 기관이 협력해 지역의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안전을 위해 요인을 개선하려는 꾸준한 노력 등을 인정해 공인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소방안전본부는 공인 승인 확정에 따라 오는 11월 11일 제주시민복지타운에서 국제안전도시 4차 공인을 선포하는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제주국제안전도시 공인 승인 통보 문서]

## 국토부, K-apt 시스템 고도화로 '관리비 투명화·사각지대 해소'

주택건설공급과. 2022.10.04.

건축 정책

주택 정책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10월 4일(화)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 주택도시금융센터에서 청년재단 관계자, 부동산 포털사이트 운영사, 법무부 관계자 등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관리비 관련 청년세대의 경험과 문제의식, 관리비 관련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하였다.

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관리정보 운영 현황과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위한 전자입찰시스템 운영 등에 대해 설명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고도화 계획'도 발표하였다.

\* 관리비, 시설교체·보수 이력, 회계감사보고서 등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 공동주택 단지별 관리현황 정보를 등록·관리·공개하는 시스템('09년~)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고도화 계획'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관리비리 초기경보 활성화	- '관리비리 초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한 관리비리 이상 징후 분석 및 사례 공유 등 환류체계 정립
사업비 비교 도입	- 기존 전자입찰시스템에 업체 간 입찰담합을 방지하고 입주민의 감시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비 비교' 기능 추가 * ① 동종 공사에 대한 업체별 비교기능 ② 공사유형별 사업비 비교기능을 추가
관리비 비교 개선	-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온라인 지도상에서 유사단지 간 관리비를 더욱 간편하게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방법 개선

이어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관리비 정보 등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사례 발표와 함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 '관리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민관협력 강화방안'도 논의하였다.

아울러, 법무부와의 협업을 통해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에 관리비 세부항목 명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에 관리비 항목 반영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행복청, 건설현장 지능형 안전관리 활용해 안전한 행복도시 건설

사업관리총괄과. 2022.10.2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건설현장에 대해 지능형 안전관리를 활용한 안전한 행복도시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10월 26일(수)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 10월 14일까지 대한민국 안전대전의 일환으로 공공현장 20개소에 대해 집중점검을 완료하였고, 올해 남은 기간에도 보다 체계적인 안전 활동을 통해 재난·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행복도시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우선, 동절기 안전점검 및 건설현장 관계자 안전교육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 안전관리를 통해 건설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차단하고, 3차원 비아이엠(BIM) 기반의 묶음형 시범사업 도입 등을 통한 선제적 안전관리로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건설할 계획이다.

추가로, 건설현장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 건설관계자 시상상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정착에도 매진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건설사고 사망자 비율의 약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사비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안전 점검, 맞춤형 안전교육 등 특별 안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 경상남도, 11월부터 '건설공사 불법 신고센터' 운영

건설지원과. 2022.10.31.

건축  
정책

안전

경상남도는 도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1월부터 '건설공사 불법 신고센터'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여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그간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의 불법 사실에 대해 우편,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했으나, 도민이 접근하기 쉬운 도청 누리집에 신고창구를 마련하여 더 손쉽게 신고할 수 있게 하였다.

\* 건설공사 불법 신고센터 위치: 경남도 누리집 > 전자민원 > 일반 신고센터 > 건설공사 불법 신고센터  
'건설공사 불법 신고센터'는 도 발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하도급, 불공정한 하도급계약, 부실시공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모든 행위가 신고 대상이다.

특히 부실시공 신고는 부실시공 등급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하도급 및 부실시공 행위는 건설공사 관계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우나, 신분 노출 등이 부담되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경상남도에서는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온라인 제보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한편 경상남도는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하도급 관리 강화를 위해 건설공사 불법 신고센터 운영과 더불어 하도급계약 초기 단계에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여 불법·불공정 하도급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공사 진행 중에는 연 2회 하도급 실태를 점검하여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이 이행되고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국내 건축도시 분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자료와 정책정보 및 학술연구정보 구축을 통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지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건축기본법」 제정 이후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기록자료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학술문헌 및 연구정보 구축을 통해 건축·도시 분야의 관련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세종타워B 8층,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architecture and urban policy information center,  
KT&G Sejong Tower B 8F, Gareum-ro, Sejong-si, 30116, Korea



ISSN 2635-5140